광주시·국방부 군공항 이전 논의

타 지역 연대 특별법 개정 추진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선행돼야 광주시·전남도 TF도 14일 첫 회의

광주시가 답보 상태인 군 공항 이전 추 진을 위해 국방부, 전남도와 소통을 본격 화하고 있다.

광주시 군 공항 이전추진본부는 12일 시 청에서 국방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.

광주시 측은 이전 지역에 군 공항을 건 설하고 현 부지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충 당하는 '기부대양여' 방식은 한계가 있다 고 보고 특별 회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건 의했다. 광주시는 대구, 수원 군 공항 이전 도 비슷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다른 지역과 연대해 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.

시는 이날 예비 후보지를 결정하고도 화

성시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친 수원 군 공 항 사례를 들어 이전 후보 지역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우선시하는 국방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.

시는 또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예비 이 전 후보지 선정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

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군 공항 이전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구성 합의한 태스크포스(TF)도 14일 광주전남 연구원에서 첫 회의를 연다.

시·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그동안 실무지원단에서 구성·운영 방안 논의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출범하게

이전 후보 지자체를 설득할 만한 대안을 도출하는 게 TF의 핵심 과업으로 꼽힌다.

5조7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이전 사업 비와 4500억원으로 책정된 지원 사업비 총 액을 늘리고 보조금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해결 과제다. 전남도에선 이전 사업비를 최소 1조원대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.

다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방사광 가속기 유치와 묶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추 진해왔다는 점에서, 방사광 가속기 유치 실패로 동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.

이 시장과 김 지사는 3월 25일 방사광 가 속기의 전남 유치에 힘을 모으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의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. 하지만 전남도 는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실패했다.

광주시 관계자는 "정치적으로는 국회의 원 등의 도움을 받아 특별법을 개정하고, 행정적으로는 TF를 중심으로 정책을 발굴 해 나갈 계획"이라며 "민간에서는 대정부 촉구와 이전 지자체와 공감을 확산해 성과 를 내도록 하겠다"고 말했다.

/박진표 기자 lucky@kwangju.co.kr

21대 총선 당선인에 듣는다

민주당 목포 김원이

"중산층·서민에 꼭 필요한 일꾼 될 것"

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전력 자영업・소상공인 배려 필요 국회서 국민위해 싸울땐 싸워야 민주원칙 지키는 정치인 되겠다

"중산층,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. 그 길에서 필요하다면 싸울 땐 싸우는 정치인이 되겠다."

4·15 총선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원 이(52·사진) 국회의원 당선인은 12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"공직에 들어 선 이래 제민지산(制民之産)이라는 말 을 늘 마음에 품고 산다. 국민 생업이 곧 정치의 근본이어야 한다"며 21대 국회 등원 각오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.

김 당선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 문제가 심각하다며 "목포의 경우 자영업 자와 소상공인이 많은데 정부와 정치권 의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 하다"고 강조했다.

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첫손에 꼽았다.

김 당선인은 "가장 먼저 목포대 의과 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"며 "박지원·윤소하 의원님과 함께 힘을 합치겠다. 두 의원님께 목포 의대 및 병원 유치를 위한 공동추진위원 회를 만들자고 제안도 드렸다"고 소개했

그러면서 "사실 목포대 의대 및 대학 병원 설립 문제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지역사회 선배님들에 의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"며 "두 선배 의원님을 비롯 한 지역 정치권과 함께 목포 시민의 숙 원 사업을 꼭 풀고 싶다"고 강조했다.

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21대 국 회 희망 상임위원회로 보건복지위원회

나 교육위원회를 꼽았다. 보건복지부는 의사 정원, 교육부는 의대 신설 여부를 관장한다.

1호 법안으로는 지방재정에 보다 자 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'지방분권 법' 개정과 '지방청년지원특별법' 제정 을 놓고 고심 중이다.

"진정한 지방분권, 지방 청년들의 일 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을 가장 먼저 발 의하고 싶다. 지방의 열악한 재정 상황 으로 인해 분권의 의미가 퇴색하고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 다. 이 때문에 지방 청년들이 고향을 등 지는 이유가 되고 있다. 지방이 살지 못 하면 (대한민국) 미래도, 청년도 없다. 가장 먼저 추진할 생각이다"

김 당선인은 정치 입문에 대해 "항상 중산층과 서민의 편이 되고 싶었다. 그 들 편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드는 게 꿈이었고, 그게 정치를 하는 이유"라고 말했다. 이어 "공직의 길을 걸으면서 제가 자란 목포

에서 목포 시민을 위해, 목포 발전을 위 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 게 됐다.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춰 고향에 서 그 시작을 하고 싶었다. 그래서 정말 많이 준비했다"고 했다.

그러면서 "수많은 스승에게 정치를 배 웠다. 김대중 대통령께는 '서생의 문제 의식과 상인의 현실 인식을,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생께는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 를 배웠다. 그리고 박원순 시장에게는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배우며 제 고향 목포 발전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"고 설

한국 정치 풍토와 관련해서는 "그동안 국민께 비친 국회 모습은 한심스러울 때 가 많았다. 그러나 싸울 때는 싸워야 한 다고 생각한다. 다만 싸우는 목적은 오 로지국민이어야한다"고했다. 그러면 서도 "치열하게 토론하고 토론의 결과에 순응할 줄 아는 기본적인 민주원칙을 지 키는 정치인이 되겠다. 일을 제대로 하 는 국회의원이 돼 국회에 쏠려있는 국민 의 한숨을 조금이라도 덜도록 노력하겠 다"고 다짐했다.

신안 도초 출신인 김 당선인은 목포에 서 초·중·고교를 다녔다. 성균관대 재학 중 광주 학살 및 5·18책임자처벌 특위 학과위원장과 총학 정책국장을 거쳐 서 총련(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) 정책위 의장을 지내는 등 학생운동에 뛰어들었 다. 목포에서 대밭골노동청년회 야학 강 사, 청계 농공단지 노동자로 일하기도 했다.1996년 서울 성북구청장 7급 수행 비서로 정계에 입문, 김대중 정부 청와 대 행정관을 거쳤다. 고(故) 김근태 열 린우리당 의장의 보좌관으로 오랜 기간 동행하다 김 의장 사후 박원순 서울시장 을 도우며 서울시 정무수석과 차관급인 정무부시장까지 올랐다.

/김형호 기자 khh@kwangju.co.kr



김영록(왼쪽에서 네번째) 전남지사가 12일 오후 여수시청에서 김한기 ㈜한양 대표와 여수 묘도 일원에 '동북아 LNG Hub 터미널' 건설을 위한 1조 3000억 원구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.

전남도-한양, 여수 묘도 'LNG터미널 건설' 협약 체결

2023년까지 1조 3000억 투자 광양만권 대기질 개선 기대

전남도는 12일 "㈜한양과 1조 3000억원 을 투자해 여수 묘도 일원에 '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'을 건설하는 투자협약을 체결 했다"고 밝혔다.

㈜한양은 1단계로 오는 2023년까지 20 만kl급 LNG 저장탱크 4기와 기화송출장 비, 12만 7천t 규모의 선박을 댈 수 있는 부두시설을 건립하고, 한국지역난방공사 와 한국남동발전㈜ 등 5개 발전자회사는 LNG터미널 시설 이용을 적극 검토하기로

업용으로 사용될 석탄연료는 청정 LNG로 계획 승인으로 이어졌다. 대체돼 광양만권 대기질 개선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 향후 수 소연료전지, 냉열을 이용한 저온물류 등 연관산업 유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으로 전남도는 전망했다.

그간 전남도와 여수시는 대규모 민간투 다"고 말했다. 자사업인 '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'사업 을 지원하려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, 관세청을 방문해 조기 인허 가,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는 등 지원 활동 을 펴왔다.

이에 힘입어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'코로나 19'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기업 투 자 애로 해소지원 프로젝트에 '동북아 이번 투자를 통해 여수산단 내 발전·산 LNG 허브 터미널'이 포함, 산업부의 공사

김영록 전남지사는 "이번 대규모 투자는 '코로나19'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 에서 지역 투자심리 회복에 큰 청신호가 될 것"이라며 "여수시와 함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

이날 여수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 한기 ㈜한양 대표와 LNG 터미널 잠재 수 요처인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, 유 향열 한국남동발전㈜ 사장, 박형구 한국중 부발전㈜ 사장, 김병숙 한국서부발전㈜ 사 장, 박일준 한국동서발전㈜ 사장, 김병철 한국남부발전㈜ 부사장을 비롯 김영록 전 남지사, 권오봉 여수시장 등이 참석했다.

/김형호 기자 khh@kwangju.co.kr

인권도시 광주, 인권지표 대폭 개선

73개 지표 중 61개 향상

인권도시 광주의 인권지표가 지난해보 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.

광주시는 "'2019년 인권지표 개선율' 을 분석한 결과 5개 인권지표 영역 가운 데 4개 영역이 지난해보다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"고 12일 밝혔다.

영역별 개선율은 '행복한 삶을 실현하 는 도시영역'이 22.9%였으며, 문화를 창

조하고 연대하는 도시영역 17.8%, 사회 적 약자와 함께 하는 도시영역 5.2%, 자 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영역 2.5%,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영역 5.5% 등이었다.

세부지표 73개 중 61개가 향상됐다. 이 는 2018년 58개보다 3개 증가한 것이다. 반면 하락지표는 전년 14개에서 12개로 2개가 감소했다.

'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영

역'에서는,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기준 준수 지수(79.9→86.8점)가 크게 개선 됐으며,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참여 율(2.00→2.08%), 자원봉사참여율 (8.17→8.50%) 등도 광주형 자원봉사플 랫폼 구축과 세계수영대회 개최기간 나 눔과 연대의 광주정신 실현 등에 힘입어

'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영역'에서 는 노인 치매 조기 검진 수검률(12.8→ 29.5%)이 치매안심센터 개소 이후 대폭 향상됐다.

/박진표 기자 lucky@kwangju.co.kr

